

‘李 최측근’ 정진상 강제수사…野 “국면 전환용 정치탄압”

〈재명〉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지난달 이어 세번째 시도…당직자들과 대치

민주 “국민 분노 수사로 돌리기”…국힘 “법 집행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여야의 갈등도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각종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몸통’을 향하고 있다”고 공격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 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9일 오전부터 정진상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아파트 내부와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에도 비슷한 시간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당직자들이 수사팀의 출입을 막으면서 대치가 이어졌다. 이 대표의 측근 수사와 관련,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국회 본청에 있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관례에 따라 영장 집행 전 김진표 국회의장 측과 면담했고, 김 의장 측은 검찰에 ‘국회 본청이 가진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직무와 관련해 총 1억4000만원의 빚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향해 가고 있다”며 “민주당에 요청한다.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합쓰지 마시고 민생에 집중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 당직자의 반발로 여의도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당당하게 검찰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며 “정당법 법 집행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빌발어 이익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돈과 유혹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대장동 형제들’이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조성하고 사용했는지 그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대장동 이익공동체를 위한 방패막이로 휘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탄핵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이태원 사고를 정쟁용 호재로 삼아 국정조사나, 특검이나 떠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몰타기 할 생각이었겠지만,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진범이 누구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선숙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압수수색을 시

도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정치 보복 수사로 돌리려는 정권과 검찰이 야합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총체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식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했다”라며 “당사에 별도의 (정 실장) 사무실도 없고, 거기서 근무한 적도 없는 걸 알면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고 강조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정진석 의원은 “국회 본청을 탄압하는 만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론을 더욱 강하게 추궁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

일시_2022. 11. 9.(수) 13:30 장소_국회 본관 245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상생’ 노동인권회관 건립 무산 우려

홍기월·김나운 시의원 “내년 예산에 반영 안돼”…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민선 7기에 추진됐던 노동인권회관 건립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년 본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은데다, 광주시가 재정 부담과 사업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홍기월(민주·동구1) 의원은 9일 광주시 노동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사상생 도시를 천명한 광주시가 풀연 노동인권회관 건립 방향을 선회하며 사실상 건립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애초 계획이면 지난달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건립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홍 의원

은 전했다.

홍 의원은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아 이 사업은 지지부진을 거쳐 무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지 매입과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와 일부 기능중복 등의 이유로 풀연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건 지역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인권회관 건립은 지난 2019년 노사민정 협약에 따라 추진됐으며, 합리적인 노사문화 조성 및 노동인권 향상, 노동인권 실태 등 의제발굴과 연구·토론 등의 기능이 주요 목적이다.

회관은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도첨산단)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동 인권·역사 전시관, 자료실, 노동자 복지·편의 시설 등을 갖춘 예정

이었다. 김나운(민주·북구6)의원도 “노동인권회관은 지역 노동인권을 위한 대표적인 공간으로, 지역 노동계와 시민들의 오랜 관심과 기대를 받아 왔는데 시가 노·사·민·정 모두의 뜻에 따라 진행된 사업을 특정 노동단체와 결부시키고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려는 노동인권회관 건립 시기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건립과 연계해 2단계로 나누고 연기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도시첨단산단은 현재 분양 단계여서 착공을 서두르다 해도 노동자들이 이용이 될 것”으로 본다”며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해 기업들이 이미 입주해 있는 광산구 빛그린 산단 노사동반 성장센터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노동인권 회관은 2024년 착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시교육청, 교권침해 사례 급증에도 방관만”

신수정 시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신수정(민주·북구 3)의원은 9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만 몰두하는 요식행위에 치중하고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침해에 따른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신 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교권 침해 건수는 2018년 63건, 2019년 73건, 2020년 35건, 2021년 67건, 2022년 전반기 53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평균 64건에 이른다. 그런데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는 기초적인 회의 개최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2018년 5회, 2019년 4회, 2020년 2회, 2021년과 2022년에는 단 1회에 그쳤다.

신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매년 줄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준다”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피해 교원을 발굴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장 책임부담 덜어야”

박희을 시의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광주시의회 박희을(민주·남구 3) 의원은 9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드 코로나를 맞아 학교 체육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책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광주시 일선 초·중·고교는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 각종 사고 및 시설 훼손을 이유로 개방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선 학교장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의 개방을 각종 사고와 시설 훼손을 이유로 꺼리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



중돼 있어 보안과 도난사고, 시설훼손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을 교육청이 지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 광주시와 교육청이 시설 확충 관리에 관한 비용을 늘려 도난 시설훼손 등의 사고를 줄여야 한다”면서 “시설 보안 등 대책마련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약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